민주, 정권심판론 재점화… 朴 맹비난

〈근혜〉

한명숙 "민간인 불법사찰 한국판 워터게이트"
문재인 "박근혜, 유신체제 잘못 시인·사과를"

민주통합당은 14일 4·11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권심판론을 재점화, 총선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겸하면서 국민에게 '이명박, 박근혜 공동책임론'을 주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양극화가 사상 최악이다. 이명박정권이 내세운 '747'의 결과가 거꾸로 나타났다"며 "1% 부자와 재벌을 살찌우는 MB노믹스를 폐지하고 99%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내건 플래카드를 만들었다고 소개한 뒤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착각했다"며 "좋게 말해 정책 중도화 경향, 수렴화 현상으로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흉내 내기다. '줄푸세' 폐지 없는 복지는 기만, 거짓, 악마의 유혹"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박 위원장이 전날 부산을 방문해 "산업화 과정에서 피해본 분들께 사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모든 것을 말한 마디로 해결하려는 듯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참 편리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민주화 독재 속에 상처받거나 희생된 영혼들이 마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처럼 취급돼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박 위원장은 줄푸세 공약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박근혜 복사기'로 다시 얘기한다"며 "보수언론이 아무리 총선쟁점을 서민경제 파탄, MB정권 심판에서 옮기려 해도 'MB-근혜노믹스' 책임론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말이 참 아쉽다"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은 피해'라는 거듭된 표현은 피해는 안타깝지만 당시 국가권력은 정당했다는 말로 들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오직 '본의 아닌 피해'란 말뿐 유신체제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말은 없었다"며 "유신체제의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유린이 잘못이었는지 아닌지 박 위원장께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역대 어떤 정권도 이러한 대범한 조작을 한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참 겁도 없다"며 "나가도 너무 막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의 은폐·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고리1호기 냉각기능 상실 은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전 고리원전 "즉각 폐쇄하라"

시민단체·정치권… 기장군 "국제 전문가 참여 정밀 점검" 촉구

계획 예방 정비 중이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지난달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리원전 측은 경보를 발령하지도 않고 이 사실을 한 달 넘게 감추다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고리 1호의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고, 부산 기장군은 원자력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제적 안전점검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9일 오후 8시34분께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 전원 공급이 끊어지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백색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발전소에 주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주재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사실을 위원회에 알린 것은 사고가 일어난 지 거의 한 달 뒤인 이달 12일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고리1호기 냉각기능 상실과 은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고리1호기의 폐쇄를 촉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이명박 정부의 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안일하고, 무책임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명연장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폐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날 오전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프랑스, 미국 등의 전문가 집단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이 없다면 11만 기장군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라는 무겁고 힘든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새누리 "총선 공약 5년간 89조원 마련"

주식양도 차익과세·금융소득 과세기준 인하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진심을 품은 약속(진품약속)' 을 실천하기 위해 5년간(2013년~2017년) 총 89조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키 위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 대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려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기본 조세원칙을 지켰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 등이다.

재원조달 원칙으로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리고 ▲재방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 ▲국제기구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과 세입확대 비율을 6 대 4로 유지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새누리당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제한해 13조8000억원의 여유 재원을 남겨뒀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등이 제시됐다.

영상검사 등 수가구조 합리화와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으로 6.4% 가량(연간 10조원)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軍, 천안함 2주기 합동훈련

23~27일 음주·골프금지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2주기(3.26)를 맞아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합동훈련 등 각종 결의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백령도와 연평도, NLL 인근에서 25일께 실시될 합동훈련에는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해병대 전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26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로 선정해 부대별 결의대회와 조기를 달기로 했으며, 23일부터 27일까지 천안함 추모기간에는 음주와 회식, 골프를 금지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천안함 2주기 추모식은 26일 오전 10시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가족과 천안함 승조원, 시민, 각 군 장병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연합뉴스

"급여 올려 달라" 경찰이 헌법소원

소송비 3억여원 모금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2천여명을 비롯해 경찰과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억5000만원을 모금했다/연합뉴스

정부 위안부 문제 중재위 카드 꺼내나

양자 협의요구 불구 6개월째 상황 불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 시기를 놓고 정부의 막판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지난해 9월15일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를 처음으로 요구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안팎에서 이제는 중재위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중재위 구성 요구는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분쟁해결을 위해 양자협의를 먼저 하되 안되면 한일 양국이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안부 생존자가 시간이 갈수록 주는 점도 중재 제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됐던 지난해 8월에는 69명의 피해자가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이 숫자가 61명으로 준 상태다. 여기에다 이달 말쯤 일본의 교과서 검정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시기 선택의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중재위 구성 제안이 사실상 마지막 압박 카드인 만큼 일본측 움직임을 보고 적절한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26~27일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모종의 해결방안을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연제동,본촌동,신용동,용전동 일대부동산전문

첨단2지구상가,단독물량다량확보

상가및근린시설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자이옆코너 대지: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3000세대.용두인근3000세대상권

체인음식점,병원,교회등적합 평당:300만

양산택지지구토지매매

본촌동원룸부지 300여평 평당:160만

연제동아파트정문앞도로변 상가지150평당:250만

본촌동아파트,중학교앞도로변:100평당:280만

양산동대로변코너상가대46평 3층 81평:3억5천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양산초주변주택지37평:6500만(주택멸)

양산동,양산동성당주변택지51평. 평당:110만

광주외곽인근

용전동 도로삼각코너변:1300평 평당:130만

용강동자연녹지 답:900평 평당:13만

시외매도물건

장성군 북이면 임야:13.500평 평당: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약700평 평당:50만

신용동생산녹지지역:900평 평당:40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50번지

T.062)572-8500 FAX:572-0732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주요취급업무 : 중심상업용지, 상가/주택
주차장용지, 혁신도시주변토지 등

사실분, 파실분 의 방문상담을 환영 합니다.

나주혁신도시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061)333-7077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619-3651

전남나주시산포면 매성리854-32(위치: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상가
· 북구 용두동 근린상가 5층중 2층상가 46평 감정가 2억7천만 최저가 1억5천만

공장및창고시설
· 광산구 하남동 공업지역내공장 대지550평 2층건물756평 감정가 14억 최저가 9억8천만
· 담양군 창평면 창고시설 대지455평 건물120평 감정가 2억 최저가 1억4천만

농 지
· 나주시 반남면 농림지역 답3650평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농가주택
· 북구 지야동 단층주택 대지101평 건평66평 감정가 1억1천 최저가9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광산구 대산동 관리지역 전망좋음 차량진입가능 현 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능) 매매 8천만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증도대교앞 생산관리 답7500평 매매 1억7천만(조정가능)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융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융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종 주거지역 토지구함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